

법원, '전두환 추징금 55억원' 신탁회사 집행 이의신청 기각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법원이 기각 별도 행정소송은 항소심 진행 계속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 55억원과 관련, 부동산을 관리한 신탁사가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서경환·한창훈·김우진)는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에 신탁한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와 관련돼 있다. 해당 임야는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가 전씨의 차남인 재용씨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지만,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원으로 전체 58.2% 수준이다. 추가로 추징해야 하는 금액이 922억원에 달하지만, 2021년 11월 전씨가 사망하면서 환수가 어려워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 사망 시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차가 중단된다. 현 시점에서 미납추징금 중 환수 가능한

금액은 오산시 임야 판매대금 55억원 가량으로, 검찰은 2013년 6월 미납추징금집행팀을 구성하고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해 둔 임야 5필지를 압류 조치했다. 국제정 등은 전씨의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2017년 이 임야를 공매에 넘겼는데, 교보자산신탁은 2019년 1월 해당 임야에 75억 6000만원의 판매대금이 배분되자 5필지 중 3필지에 해당하는 판매대금 배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

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교보자산 측은 행정소송의 경우 추징집행 이후 처분 시점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한 것일 뿐이라며 이번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아직 3필지 배분금이 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아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으니, 집행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이슬기자



이태원 상권 회복세 이태원 참사 직후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던 인근 상권 매출이 약 80%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신한카드사 매출과 지역 상품권 사용액을 바탕으로 분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1동 상권 5월 매출액이 지난해 참사 직전인 10월4주 대비 75.6%까지 올라왔다고 밝혔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1동 모습.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될까... '특례법 제정'

의정,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 대책 논의 공감대 필수 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검토는 '아직'

의료계가 의료 인력 확충에 합의하며 한 발 물러서자 보건복지부(복지부)도 필수의료 분야가 기피 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계 숙원대로 고위험 수술이나 신생아 사망 등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때 형사 처벌을 면책하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이 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추진과 관련해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범위 확대라든지 현행법(의료분쟁조정법) 체계에서 환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의료인의 형사 처벌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대안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연구 용역을 하고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 형사 처벌 특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거나 이탈하는 원인 중 하나로 의료사고 책임 문제도 크다고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고위험 수술 등을 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하기 때문에 면책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낸 바 있다.

지난해 의협이 1159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국가가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의료수가 정상화'가 41.2%로 가장 많았으며 '필수 의료 사고로 발생하는 민·형사적 처벌 부담 완화'가 28.8%로 그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형사

처벌을 면책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사회장은 지난 8일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환자의 쾌유'라는 생각만으로 시행된 의료행위 중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환자 상태가 나빠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면 의사로서의 삶에 대한 회의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8일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 논의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에 뜻을 모았다. 의료사고 면책과 관련한 논의는 향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환자단체는 이 같은 의료사고 면책 특례법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내용으로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 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이 예시로 언급된 것과 관련해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 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를 추진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향해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 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가 아닌 의료인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을 풀어주고,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적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선옥기자

'구명조끼 미착용' 60대 갯바위 낚시객 바다에 빠져 숨져

갯바위에서 헛디더 바다에 빠진 것으로 추정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남성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11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20분께 전남 고흥군 영남면 용골마을 인근 갯바위

에서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 A씨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사고 해역에 경비함정 3척을 급파해 표류 중인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의식을 잃고 숨졌다. 해경은 A씨가 갯바위에서 발을 헛디더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